

공정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만든다... "소비자 힘 키워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분쟁 조정' 등 맡을 재단 설립이 핵심
 공정위는 재단 사업 승인, 자금 지원도
 '단체 소송' 활성화하도록 제도 손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점차 다양·복잡해지는 소비자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치·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단체 소송제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 권

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다. 소비자 교육·정보 제공을 비롯해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 조정 등 피해 구제 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법상 동의의결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맡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 승인하고, 사업 실적·결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학계·국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적 재원 조성 플랫폼을 설립해 소비자 운동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단체 소송제 합리화는 기존 공정위 등록 소비자 단체·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곳이다. 공정위가 소송 수행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단체 소송 관련 활동을 맡을 수 있다.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소송 허가 절차도 폐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받아야 했던 허가 절차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이 절차는 그동안 단체 소송 활성화를 막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고 했다.

소비자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됐을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이 현



여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단 소송 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 또한 도입했다.

공정위는 "독일·일본 등지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해 예방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서 "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소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더했다"고 했다.

소비자정책위 기능 강화의 경우 '실태 조사권'을 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소비자정책위 운영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 행태, 거래 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 조사를 위해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를 내줘야 한다. 실태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에 관해 공정위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 회의·국무 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내도된다.

김민정기자



올해 첫 출하된 델라웨어 포도 드세요 12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올해 첫 출하된 '델라웨어' 포도를 선보이고 있다.

전남도, 수산물 가공·유통기업에 청년 일자리 지원

최장 6개월 간 월 181만원 인건비 지급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가공·유통 기업을 위해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상품 판매, 전산 관리 등 신규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연계한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가 오는 19일까지 일자리 희망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유통판로 대응 역량과 인적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에 디지털 인력을 확보해 기업체 취업을 연계하고, 일자리를 유지토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디지털 인력과 참여기업 부분으로 나뉜다. 디지털 인력의 경우 전남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이거나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수산식품 온라인 상품 등록, 물류배송, 비대면 고객 지원업

무다.

참여 기업에 최장 6개월 간 월 202만원(보조금 181만원, 기업부담 2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영조 전남도 수산유통기공과장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수산물 오프라인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전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한우·낙농 6억원, 연리 1.8%

전남도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차로 사료 구매자금 25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는 용자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우유,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법인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바라는 농가

는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 6억원, 양돈·양계·오리농가 9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이다. 농가당 산출금액은 마릿당 지원단가와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전남도는 올해 후반기에도 배합사료 가격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 2차 배합사료 구매자금 약 200억원을 오는 7월께 수요조사 후 지원할 계획



이다. 지난해는 총 508억원을 지원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약 10%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코로나 이후 가장 가고싶은 해외 여행지는 '괌'

인터파크 항공권 예매 1만2137명 조사

코로나 사태 종식 후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괌이 꼽혔다.

인터파크가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해 판매한 항공권 구매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34%가 괌을 골랐다. 베트남(17%)·일본(17%)·대만(10%) 순이다.

오랜 기간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한 만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괌이나 베트남 등 휴양지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단체 보다 가족 단위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반영됐다.

인터파크가 지난달 8~31일 판매한 이 항공권을 산 고객은 모두 1만

2137명이었다. 이 항공권은 이른바 '열린 항공권'이다. 공식적으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점부터 1년간 이용 가능한 단거리 노선 왕복 항공권을 바꾸어 형태로 사전 판매됐다. 이용 가능한 시점부터 1년간 가격 변동 없이 최초 구매가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가격 역시 급등할 수 있다"며 "열린 항공권은 가격 변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여행 일정 선호도는 3일(66%), 5일(19%), 4일(15%) 순이었다. 1인

당 항공권 구매 수량은 2매 이상(76%)이 1매(24%)를 구매한 인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매 수량별 비중은 1매(24%), 2매(36%), 3매(14%), 4매(22%), 5매 이상(4%)으로 집계됐다. 짧은 일정으로 해외를 여러 차례 다녀오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터파크는 포스트 코로나 여행 수요 인기에 힘입어 고객 감사 차원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연장한다.

기존 21개 노선에서 25개 노선으로 확대해 오는 30일까지 '더 열린 항공권' 프로모션을 연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나기자

홈플러스, 본격 사업 투자... "사람·매장·환경에 돈 쓴다"

올해 10개 점포 스페셜 매장으로 전환
 3년 만에 상품 부문 바이어 선발 공채
 환경보호 인식 높이는 ESG 경영 확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 추가를 중심으로 한 본격 사업 투자에 나선다. 홈플러스 스페셜은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이 결합된 형태 매장이다. 소용량 제품이 필요한 1인 가구와 대용량 제품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12일 "지난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매장을 정리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더 잘 되는 곳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연말까지 전국에 10개 점포를 홈플러스 스페셜로 전환한다. 오는 7월 말까지 원주점과 인천정라

점이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이 된다. 이후 연말까지 매월 1~3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전환해 다시 열 계획이다. 수도권 주요 점포를 비롯해 영남권 등 지방 소재 점포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스페셜 매장은 20개다.

점포 전환과 함께 인력 투자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근무 직원을 선발하는 초대졸 공채를 2017년 이후 3년 만에 했던 홈플러스는 이번엔 상품 부문 신입 바이어를 선발하는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젊은

피를 수혈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 최신 트렌드 선도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ESG 경영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점포에 있는 문화센터와 연계해 환경인형극, 체험학습 등 환경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자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 교육 활동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의 사회공헌재단 '파란재단'이 2000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어린이 환경 프로그램 '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를 상반기 중에 열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호의 중요함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군 내 타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갖춘 '그린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자체 브랜드(PB·Private Brand) 제품을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했고, 배송 상품은 생분해성 봉투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3년 간 운영했던 종이 전단은 지난 1월부터 디지털 전단으로 전환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 분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경영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고객께 약속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